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리 의혹' 수사 급물살

광주지검, 인사담당 사무관 구속
면접평가위원에 외압 행사 혐의
경찰 '봐주기' 논란에 직접 수사
교육단체 '윗선 공정 수사' 촉구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인사팀장이었던 50대 사무관 A씨를 구속하면서 수사에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검찰이 경찰에게 재수사 요청을 하지 않고 직접 수사를 맡은 뒤 지난 2023년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됐던 A씨를 구속하면서 수사의 칼끝이 '윗선'을 향할지 주목된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지난 20일 광주시교육청 소속 A사무관을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

A사무관은 지난 2022년 8월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면접평가를 주관하던 중 평가위원 2명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사무관은 교육청 본청의 과장들과 학교장의 연령이 60대인 점들을 언급하며 '감사관은 너무 젊은 분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등 교육감의 고교 동창 출신 후보의 점수를 상향 수정하게끔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와 광주교사노조는 지난 2022년 11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고교 동창인 유명길 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과정에서 청탁이 있었는지 확인해달라고 감사원에 공

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2023년 7월 개방형 감사관 채용 업무에 부정이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광주시교육청 인사팀장이었던 A사무관이 당시 면접 과정에 개입한 뒤로 3순 위였던 유 전 사무관의 순위가 오르면서 최종 선임됐다는 것이다.

이후 교육단체에 의해 2023년 9월 이 교육감과 김 전 광주시 부교육감, 면접위원 2명 등 7명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고발당했다. 하지만 검찰은 A사무관을 제외한 나머지 7명에 대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처분을 내려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반발이 나왔고 교육단체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경찰로부터 관련 사건 기록 일체를 넘겨받아 형사소송법상 반환기일인 90일이 넘도록 사건 기록을 경찰에 돌려주지 않고 있다. 또 이 교육감 등 불송치 처분된 7명에 대해서도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하지 않는 것을 봤을 때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법조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실제로 검찰은 경찰과 달리 지난달 김현주 전국교직원노조 광주지부장과 박삼원 광주교사노조 위원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20일 A사무관을 구속했다.

검찰은 A사무관을 상대로 상부 지시에 따라 행동했던 것인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추가 수사 진행 상황

에 대해서는 "기밀성 등을 이유로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A사무관이 구속되자 교육단체들도 엄정한 수사를 강조하며 교육감 등 비리 사건의 내막을 밝혀낼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지난 2022년 이 교육감 고교 동창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점수 조작 비리에 관련한 A사무관이 구속된 것은 늦은 감

이 있지만 적절한 조치다"면서 "감사관 채용 비리를 A사무관 혼자 주도했을 리 없고 검찰의 수사가 비리 사건 몸통을 향한 시작이 돼 교육청 내 각종 인사 의혹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광주교사노조도 "사무관 하나 구속하고 꼬리자르기로 끝나다면 검찰에게도 비난이 쏟아질 것이다"며 "교육감의 지시였는지 등 핵심사안을 결과로 보여줄 기대

한다"고 말했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도 "이번 수사로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 행정이 확립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교육청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아직 수사결과에 관한 공문을 받지 않았고 이미 지난해 A사무관에 대해 징계(정적 1개월)를 내린 만큼 따로 인사조치를 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어르신 뎀안마음 케어' 스마트 경로당 개소식 문인 광주 북구청장과 경로당 관계자들이 지난 21일 북구 우산동 무등산자이&어울림 1단지 경로당에서 광주 최초로 문을 연 '어르신 뎀안마음 케어' 스마트 경로당 개소식에서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광주 북구 제공

17명 사상... 광주 학동 참사 책임자들, 항소심서 감형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17명을 사상케 한 광주 동구 학동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현산)과 일부 불법 재하도급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받은 백솔기업 대표 A(52)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던 한솔기업 현장소장 B(32)씨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2명에 대해 도주우려를 이유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감리사 C(63)씨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유지하되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이밖에 다윈이앤씨 현장소장 D(53)씨

와 현산 측 피고인인 현장소장 E(61)씨에 대해서는 원심이 유지돼 각각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집행유예 3년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또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던 안전부장 F(60)씨와 공무부장 G(57)씨, 법인 현산·한솔·백솔 기업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이들은 안전 관리·감독 소홀로 지난 2021년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공

사 현장에서 5층 건물의 붕괴를 일으켜 정차 중인 시내버스 탑승자 9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해체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과 공사부지 상황에 따른 조치를 미흡하게 한 점, 건물 하부에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은 점 등을 사고 원인으로 봤다.

기존 해체 계획서와 달리 건물 1층 보 5개 중 2개와 2·3층을 철거했고 12m가량 쌓인 흙더미 무게를 버티지 못한 1층 보 3개가 주저앉으면서 건물이 도로 쪽으로 무너졌다는 것이다.

다만 굴착기 기사로 참사의 직접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은 A씨와 B씨가 '뽕뽕 굴착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기간을 단축해서 이익을 더 창출하려는 건설업계의 작업구조가 안전한 길보다 빠른 길을 선택한 결과 또 다시 이러한 사고가 났다"며 "피고인들이 피해 유족들과 합의한 점, 각 피고인 별로 사고 직후 수습이나 수사 협조 태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민현기 기자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쿡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